

‘전기차 메카’ 광주 인프라 늘리고 혜택 대폭 확대를

군산시 등 유치 경쟁 치열

충전소 설치·보조금 확대 필요

광주형 일자리 모델 만들어야

휘발유·경유·LPG 차량이 중심이었던 자동차산업이 친환경 전기차 위주로 진화하면서 전기차 제조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 국내 지자체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자동차 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전기차 시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하청기업이 줄고산하는 등 지역경제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정과 지원만을 기다리는 ‘갑나루 밑에서 입 벌리기 식’의 행정보다는 광주만의 유치전략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유치 경쟁 치열=군산시가 GM 공장 폐쇄 이후 전기차 공장 유치를 하나의 자구책으로 꺼내 놓은 것처럼 최근 국내 지자체간 전기차 유치 경쟁이 뜨겁다.

대구시는 최근 ‘전기차 도시’로 약진하고 있다. 대구시의 지난해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는 2441대다. 전년도의 보급대수 314대보다 거의 8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올해는 2810대를 추가로 보급해 5000대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를 전기차 보급 원년으로 선포, 한 해 동안 500대를 보급한 뒤 내년엔 3500대, 2030년에는 8만3500대 보급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조용 1t 전기차화물차’ 생산라인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시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근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준공·입주한 A기업은 1t 전기차화물차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직원 58명을 채용하고 21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도 240여명의 추가 채용 및 200억원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는 또 전기차 세제혜택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국가지원 외에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충전기 보급 확대 및 전국 최초의 충전기 관제센터 구축 등의 시책도 펴고 있다.

또 세종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노면청소차(4대·4시간 충전으로 8시간 작업가능)를 도입했고,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비 65원을 투입, 공공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1200기를 추가 설치했다. 서울시는 시와 산하기관에서 현장복직 전용차량 171대를 전기차를 우선 배치했다.

이처럼 국내 지자체들은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늘리면서, 앞다퉀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생산업체 유치에 나서고 있다.

◇광주만의 전기차 유치 전략 필요=국내 지자체들이 충전기 확충과 관용차량 전기차 보급 등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판도를 확보해 전기차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완성차 업체에 2019년부터 전체 판매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으로 채우도록 계획하며, 인도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시도 지난해에 수소차 15대, 전기차 27대를 이용한 카셰어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성 검증을 통해 올해부터 투입차량을 늘리고 전남 등 인근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라는 노동 모델을 만들어 전기차 유치 경쟁에 뛰어난 상태다. 타협과 협력을 통한 노사 관계를 앞세워 전기차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용차 등에 전기차를 도입하고 전기차 보조금 등을 통해 광주 지역 내 소비시장을 늘린다는 전략도 펴고 있다.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전기차 수요는 투자 기업에는 중요한 선택 항목 중 하나다. 실제, 광주시와 전기차 공장 투자 협약을 맺은 중국의 조이통자동차의 경우에도 전기 시내버스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광주시도 시내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과 협약을 마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절차적인 준비를 통해 친환경 전기차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주선 공동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5일 광주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광주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낮은 정치 틀 허물기, 호남이 마중물 역할 해 달라”

바른미래당 지도부 광주 총출동 지방선거 지지 호소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5일 동서 화합을 앞세워 광주로 총출동했다. 지난달 전주(2월19일), 대구(2월27일)에 이어 영호남을 오가는 세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다.

박 대표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은 밖에서 쫓는다”는 ‘출타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면서 “우리가 낮은 정치의 틀을 허물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도록 호남이 마중물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구, 광주간 체결된 달빛동맹이 더욱 굳건한 동맹이 돼 상생 발전의 디딤돌이 되

기를 기원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빛동맹을 이루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달구벌의 대구와 빛고을의 광주에서 착안한 달빛동맹에 영호남 세력을 합친 바른미래당이 적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날 유 대표는 “대구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24년째 꼴찌고, 광주는 꼴찌에서 2등, 아니면 3등을 기록했다”면서 “내륙 도시의 구조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대구 정치, 또 광주의 정치가 잘못된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문제를 제기해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가 1조원 가까운 돈으

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 했으나 포기했다”면서 “그러나 1년 후 다시 더블스타에 더 혈관으로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앞서 박, 유 공동대표와 지도부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영령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묵념과 헌화한 뒤 “5월 정신을 받들어 바른미래당이 지역주의 극복과 동서화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박 대표), “5·18 민주화운동의 유지를 받들어 진정한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유 대표)는 다짐을 방명록에 남겼다.

이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형 공동브랜드 성과와 향후 과제’ 간담회에도 참석해 지역 개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품클러스터 조성...광주 전기차 기업 최적지

투자기업 파격 인센티브도 매력

광주지역은 전기차 관련 부품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등 기업 활동 여건이 좋고, ‘광주형 일자리’를 토대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광주시는 정부의 지원 속에 오는 2021년까지 빛그린산단에 30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179종의 첨단장비가 마련되고, 선도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위해 1985억원이 투입된다.

또 유망기술 개발에 699억원과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에 346억원이 지원돼 광주를 선택하게 될 전기차 기업의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돕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모범사례로 뽑은 ‘광주형 일자리’

도 전기차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가 함께 만족하는 적정 임금 구조를 만들고,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등을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파격적인 광주시의 투자기업 인센티브도 매력적이다. 광주시는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 3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최대 10%까지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에 도입하는 등 광주지역의 전기차 산업 여건은 국내 어느 지역 보다 뛰어나다”면서 “기업이 마음 놓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공식 제안...정의당 오늘 의원총회 논의

장병완 민주평화당(평화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앞서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합동워크숍을 잇달아 열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의석수를 합치면 공동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의석수 20석을 채울 수 있어 원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내 의사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라며 “각당이 정책을 양보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논의 과정에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의결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이번 주라도 정의당의 입장이 나오면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평화당 제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성격상 길게 논란을 벌이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대한 진중하면서도 빠르게 판단과 결정을 내릴 예

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全)당원투표 등을 거론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하되,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당 간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제4의 교섭단체가 등장하는 셈이어서 국회 운영과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의당 내부적으로는 정체성 차이를 이유로 당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과연 이뤄질 것인지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73-증-83333호

바른미래당 다가는 **첨단우리병원**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 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자다리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곳!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앞위치!